

북한 최고인민회의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의 특징 분석

국가안보전략연구원

1. 제재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시국에 대응

- 당 정치국회의에서 작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고 보도(정치국회의 공동결정서)
-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‘10대 전망목표’ 미언급
 - 작년 12월 전원회의에서 ‘5개년 전략’(2016-2020) 달성 부진을 반영, ‘10대 전망목표’ 발표 예고
- 중요대상건설 강조점이 기존 삼지연, 원산갈마 등에서 평양종합병원(보건) 건설, 김책제철소 산소분리기(에너지 절약) 설치로 이전(2020년 예산)
 -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간 관광 수요 저조 예상 → 보건 및 자원절약 관련 긴급사업으로 강조점 전환
 - 2020년 보건예산 7.4% 증액 책정
- 재자원법 및 원격교육법 제정
 - 재자원법은 정면돌파전의 주요수단인 증산절약운동을 ‘법제화’한 것 (향후 낭비에 대해 계몽을 넘어 법적 제재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)
 - 원격교육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면돌파전의 또 다른 주요수단인 인재 양성정책이 반영된 것
- 대내 경제·사회 비상시국 대처의 긴급성을 반영, 대남·대외사업 관련 논의 부재
 - 남북 방역협력 필요성, 대미협상국 설치 등으로 대남·대미 메시지 예상됐으나 부재

2. 유일영도체계 및 ‘당적 지도’ 강화 반영

- 당 정치국회의에서 지도기관(중앙위원회) 성원 구성
 -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정치국에서 지도기관 성원을 구성할 수도 있으나, 극히 이례적이며
- 최고인민회의 격 하락
 - 이미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 격 하락
 - 특히 이번에는 김 위원장 군 시찰에 따라 당 정치국 회의가 연기되면서 최고인민회의도 보도 없이 연기

3. 軍 위상·사기 진작 및 군사전략 변화 예고

- 작년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보 강화
 - 올해 2월 정치국 확대회의, 이번 4월 정치국 회의 직전 군 시찰 행보
 - 특히 이번에는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 창출 (정치국 회의 연기로 최고인민회의도 순연)
- 2년 만에 군 총참모장(박정천)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으로 군 위상 회복
 - 리영길·김격식 등 이전 총참모장들에게는 후보위원 자격만 부여
-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제정(작년 12월 당 중앙군사위 결정 반영)
 - 기존에는 제대군관 생활보장 관련 법 체계 미비(기존에는 당 행정조치로 접근)
 -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 창출
-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 반영
 - 그간 북한은 새로운 포병 전력을 확충하고 최근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

4. 경제사업 체계·질서 재편 반영

- 경제사업 체계·질서 정돈 및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역할 강화 요구

- 경제의 통일적 관리 및 자원·자금 원천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 강조
- 대외무역 및 자원 개발·이용에서 엄격한 규율 준수 강조
- 중앙지표, 지방지표, 기업소지표의 정확한 구분 강조 (중복 생산에 따른 낭비 방지)
- 자원·재정의 중앙집권화 강화 추세 반영
 - 최근 당·군 특수경제의 이권을 내각으로 이전시키고, 부족한 자금·자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
- 내각 경제라인 보강·교체
 - 부총리 양승호, 자원개발상 김철수, 기계공업상 김정남, 경공업상 리성학

5. 기타 인사 관련 특이사항

- 김여정 당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
 - 향후 대남·대미 관련 역할 증대 예상
-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 정치국원 지위 유지 확인
 -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일성 고급당학교 비리 관련 ‘현직 해임’ (보직 해임)됐던 리만건이 정치국회의에 참석
 -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나,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(같이 해임된 박태덕 당 부위원장은 불참)
- 리선권 외무상의 당 정치국 후보위원 진입
 -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로 추정. //끝//